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또 혼미

당원 참여 25%냐 50%냐 후보 압축은 언제 어떻게

결과따라 경선판 요동…각 후보 진영 촉각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법 결정이 막판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경선에 붙인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외에 서류심사·현지실사·면접 등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이나 22일 발표될 후보 압축 결과에서 여론조사 선두 후보들이 배제될 수도 있고, 후 순위 후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후보가 경선에 진출하느냐, 시민배심원제 적용 50% 외에 나머지 50%를 당원 참여만으로 하느냐, 시민도 참여시키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다. 누구 누가 나서는지, 당원 참여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종 후보의 얼굴이 바뀔 수 있어서다. 시민배심원제 논란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황사바람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전반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모습이다.

◇**당원 참여 50%**=민주당 공심위와 지도부는 광주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당원 50% 부분에 시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50%+전당원 여론조사 25%+시민 여론조사 25%' 방안이 국민참여경선의 원칙인 시민 참여 50%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 만큼 시민 여론조사를 따로 반영하기보다는 당초 안대로 전수조사를 통한 전 당원 여론조사 50%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앙당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동원 경선을 방지하자는 측면이 강한 만큼 당원 선거인단 구성을 통한 체육관 경선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압축 시기**=광주시장 예비후보 압축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중앙당에서는 예비후보 6명을 3명으로 압축하는 방안과 1차로 4명의 후보를 압축한 뒤 여론조사를 거쳐 2명으로 다시 압축, 본선을 치르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압축 방법은 서류심사와 여론조사 각기 40%씩 반영되며 현지 실사 20%가 반영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직무수행평가와 시민만족도 평가 등이 추가로 반영된다.

압축 결과 발표 시기는 엇갈린다. 일단 19일 광주시장 예비 후보 면접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여론조사와 서류심사, 실사 등의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보가 6명이나 되는데다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22일께로 미뤄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후보 진영 셈법**=광주시장 예비 주자 진영에서는 당원 경선 방법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시민 여론조사 25%가 반영될 경우,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강운태 의원이 조금은 유리할 전망이다.

전수조사를 통한 전 당원 여론조사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주자들이 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시민 여론조사 25% 반영을 주장하는 강운태 의원과 체육관 경선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박광태 시장 측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한편, 광주시장 예비후보 압축을 앞두고 각종 합종연횡설과 불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할 경우 정치적 입지 축소 등의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 압축을 앞두고 후보단일화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5일 오후 광주 5·18기념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토론회에서 박지원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시당위원장,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지방선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시민배심원제 조작 가능성 있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정면 비판…무소속 출마 시사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15일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 방식으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를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다.

황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도 시장 군수 후보를 외지인들(전문배심원단)이 뽑지는 않았다"며 "시민배원제는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비난했다. 그는 "공천개혁 명분 아래 투명하고 광주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선방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에 큰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왜 남구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황 청장은 이어 "시민배심원제는 자칫 민주당의 덫이 되어 몰락할 수 있다"면서 "시민배심원제를 떠들고 다니는 강기정 의원은 시민배심원제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일부 후보를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광주 시민은 그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더구나 탈락한 후보들은 본선도 못 치러보고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관련한 정확한 룰이 결정될 때까지 민주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신청을 미룰 것"이라며 "특히 시민배심원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는 강기정 의원을 16일 만나 시민배심원제의 정확한 규정 등을 물어본 뒤 여러 의견을 청취해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황 청장은 이날 '효사랑 아이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명품 복지도시 남구를 건설하겠다"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후보압축 과정 탈락 후보 무소속 출마 가능

경선 참여땐 같은 선거구 출마 못해

민주당이 경선에 앞서 실시하는 후보 압축 과정에서 탈락한 후보가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할까? 일부 후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선에 앞서 실시하는 공천심사위원회 '컷오프'에서 탈락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후보 압축은 경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이 부분에 큰 혼란을 겪으면서 경선에 참여하기 전부터 탈당을 하거나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후보는 민주당 공천 후보자 서류접수 시점에서부터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접수를 미루거나 선관위와 당에 문의를 하는 등 '촌극'도 빚고 있다. 이는 현행 선거법상 당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할 경우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구와 같은 선거에는 출마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구청장 후보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하면 무소속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 등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를 둔 것은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선관위는 당으로부터 경선 참여자 명단을 받은 뒤 경선 참여자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을 제한한다. 따라서 당이 어느 시점부터 경선과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후보 압축은 경선 과정에서 당원 또는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선 사전 단계여서 경선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경선은 후보 압축 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여수에선 시민배심원제 도입 흥정?

후보 3명 '50%안' 동의…오현섭 시장은 거부

민주당 여수시장 후보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이뤄지고 있으나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후보의 반대와 민주계 박주선 최고위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여수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여수시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5명의 시장 경선 신청자 중 오현섭 여수시장을 제외한 김강식·김재철·배성기·조삼랑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모여 경선 방식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곤 의원(여수 갑)은 중재안으로 '국민참여경선 50%+시민공천배심원제 50%'안을 제시했다. 기존 시민공천배심원제 전면 도입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이 안에 대해 오현섭 시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현섭 시장을 따로 만나 중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오 시장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국민참여경선 실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귀경한 김 의원은 박주선 최고위원을 만나 자신의 중재안을 설명하고 수용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최고위원가 그동안 광주·여수·순천 등에 대한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설득을 위해 만난 자리였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명분과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날 "당 지도부가 전남 동부권의 탈당도미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둬가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